“ 사이비언론 척결은 시대적 과제 ”

온통 세상이 시끄럽다고 한다. 실제로 세상이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났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아마도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사이비언론들이 탈법과 무법천자를 만들어가며 비틀거리는 와중에 만인 앞에 평등한 정법의 촉수에 정면으로 부딪혀 일어난 일과성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앞잡이로서 친일을 무기로 행세하던 신문들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쿠데타군과 반란군의 앞잡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대가로 탈법과 무법을 하사받아 언론재벌을 형성하고, 1990년대 이후에는 민중항거에 의해 쟁취된 민주화의 일등공신으로 자처하면서 스스로를 권력화하고 「밤의 대통령」을 자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식자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한국의 사이비언론들은 10여년 동안 민주화된 세상에서 곡필과 왜곡을 정필인 양 내세우며 왜곡과 편파를 넘어 정변에 가까운 언어폭력을 행사해 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고, 그 착각은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도 머지 않은 것 같다.
YS와 DJ가 인기에 집착한 나머지 왜곡된 언론과 그에 편승한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정도정치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YS는 스스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사이비언론이 큰 역할을 했으니 봐줄만 했겠으나 DJ는 언론이 훼방을 놓았으면 놓았지 크게 신세진 것도 없고, 더군다나 반란을 선동하는 듯한 사이비언론들과 한나라당의 행태를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며 위법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정도 세정을 통해 무법과 탈법을 적발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니 그 누가 반대하고 반발할 수 있겠는가? 물론 무법과 탈법을 일삼아온 조중동이나 반란군이 모태인 한나라당은 마땅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란군과 한 패거리를 형성했던 자들과 반란군 정권 밑에서 반란법정의 법관으로 역할한 자 또한 무법과 탈법의 한 무리라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니, 그들이 탈법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으로 몰아 부치고, 세금을 포탈하고 외화도피 의혹까지 일고 있는 사이비언론 사주들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강변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조선일보는 법인 734억원, 계열기업 6곳 312억원, 대주주 일가 568억원 등 1614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864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고, 동아일보와 사주, 계열사, 광고대행사 등은 모두 1700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827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으며, 중앙일보도 탈루소득 1723억원을 적출해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 등 850억원을 추징키로 한 것이 아니던가.
대통령병 환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이비언론의 탈세를 두둔하고, 조세를 포탈한 자들을 옹호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만약 사이비들의 무법과 탈법을 덥고 유야무야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반란군이 세상을 어지럽혀도 처벌받지 않으니 오늘날 한국이 이 모양으로 개판이 되었지 않겠는가 말이다. 사이비언론의 왜곡과 반란무리들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돼 이 나라를 얼마나 어지럽히겠다고 그렇게 떠드는 것인지 참을 수 없는 노릇이다.
언론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스스로의 이해를 떠나 국민을 대변할 때 뿐이다. 2-3면, 심지어 5-6면을 스스로를 변명하고 왜곡하는데 할애하는 언론은 이미 정도언론을 벗어난 것이며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언론법인과 사주는 무법과 탈법을 일삼고, 기자는 협박과 촌지에 묻혀있는 것이 오늘의 언론집단이 아니던가. 그래서 정도 세정이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그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도 일찍이 사이비언론들을 척결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국기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사이비언론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화학저널 2001/7/9>